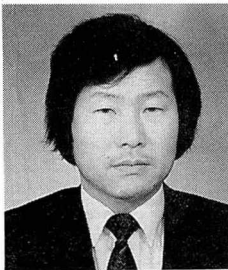




양돈업 무엇이 문제인가?



박문재
(본회 무안지부장)

우리축산업계 중에서도 양돈산업은 예측할 수 없는 가격의 불안정속에서 이른바 무역개방이라는 큰 걸림돌로 인하여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에 있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불안한 위기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솔직한 심정이며 우리들의 시급한 당면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년 5월부터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별로 반갑지도 않은 무역협상문제가 발표되면서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갈수록 험난한 파고를 감수해야 하는 농민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돈농가의 실상을 살펴보면 지난 1989년도에 540만두가 사육되면서 대불황을 맞아 대책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동호인들 중에는 과중한 부채로 폐업, 도산이 속출하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어버린 사례들을 우리들은 신문지상을 통하여 듣고 또 보았습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정부는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하려 노력하여 왔는데 오히려 막다른 길에 서게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송구스러우나 어떤 답변을 들어야 시원스러울지요?

사육농가 호수면에서 볼때 1989년 6월말 기준하여 양돈사육농가수가 232천호에서 금년 9월말로 볼때 131천호로 격감되었는데 이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도산이나 폐업을 한 농가수가 무려 101천호가 됩니다.

물론 외국의 양돈산업 보면 발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변화라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돈산업의 문제점을 열거하여 보면

지난해부터 갑자기 축산폐수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 사육호수가 격감되고 있는데 폐수에 관

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없이 양돈산업의 존폐문제는 물론 영세한 양돈인은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민의 충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여 볼때 도회지의 대기오염 가정생활폐수 중성세제의 오염도는 축산물폐수보다 더 심각함에도 최일선에서 가장 고난을 겪으며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업에 폐수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다 보니 농촌을 등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공단이 농어촌 근교에 들어서면서부터 농촌 인력은 더욱 어려운 측면에 놓여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농촌은 부녀자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기술의 저급화로 신기술 도입이 유입되지 못하여 생산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촌에 정착한 일부의 농군들이 365일 연중 무휴로 비가오나 눈이오나 국민의 식품을 생산하는 첨병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며 버티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돈 경기측면에서 보면 1989년 대불황이 엇그제 같은데 정부 경제부처의 물가안정이란 미명하에 일부의 기업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게 하여 「돼지고기 수입 뉴스」가 전해지자 곧바로 돈가는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UR의 태풍과 함께 돼지의 사육두수는 급격히 감소현상으로 나타나 1990년 9월에는 457만두로 격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돈가가 상승하자 물가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구실로 또다시 금년 9월 중에 정부에서 돈육을 수입하겠다고 하니 농민의 소리를 메아리로 듣기전에 먼저 우리 양축인의 바른 말을 곧은 소리로 들어주는 정부의 슬기와 우문현답(愚問現答)을 솔직하게 바랄뿐입니다.

우리들도 정부의 고충과 애로를 충분히는 간

파치 못하더라도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진실로 형용키 어려운 상황의 문제점 일부를 건의하오니 정책적인 배려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 축산원자재 세제개선 대책

국제화시대에 진입하는 이때 지원은 충분치 못하더라도 경쟁국에서는 시행 되지도 않고 있는 부가세가 우리 축산인에게는 부과되고 있으며 영세하여 경쟁력조차 없는 실정에서 UR협상이 진행되는 이때 부가세 영세율이 무산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실로 축산인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계속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차기 또는 정기 국회에 상정시켜 기필코 세제개편이 되도록 관철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의 파고를 넘기위하여는 배합사료, 축산약품대, 기자재등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적어도 생산원가의 약5~7% 정도 직접적인 생산원가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사료곡물 관세도 동시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 정부의 정책과 축산(양돈) 폐수처리문제

오늘날 도시의 대기오염, 소음, 악취등으로 인한 환경의 질을 보전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도 축산폐수가 더 큰 공해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축산폐수는 산업폐기물과 다른 차원에서 사고(思考)되어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축농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거름으로서 농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농산물 생산을 위한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유기농법)

비료로서 적극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별로 집단 공동돈분처리 시설을 위해 특혜적 조치(장기저리 용자)가 절대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력보다는 입법에 의한 장단기 개발계획을 세워 법적인 뒷받침하에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망합니다.

셋째 : 유통구조의 문제점

정부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등)을 물가의 주범이라 지목하면서도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산품은 매년 시시각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농산물가격, 특히 돼지고기 가격은 10년전의 가격에도 못미치는 것은 생산자인 농민의 노력 부족인가 아니면 정책 결여인가를 우리 모두는 각자 냉철히 분석해 볼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1차산업도 유통구조를 현대적으로 개편하여 유통경비를 극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유통은 과거의 답보가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낮은 생산기술 수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으므로 획기적인 변혁만이 요망될 뿐입니다. 현재의 유통 경로를 보면 축협이 계통출하경로와 상인에 의한 유통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축협을 통해 출하하면 축협공판장을 통하여 소매자에게 직접 유통되고 있으나 상인경로는 수매상이 수집하여 반출상을 거쳐 일반정육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돼지고기의 소매가격도 물가안정대책으로 연동제가 실시되고 있어 경직되어 부위간 등급간에 차별가격이 적용되지 못하므로 소비자촉진을 위한 경제계층과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함께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유통구조 단계를 조속개편해야 합니다.

비축제도와 기금부족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할 때 수입하므로써 유통적기에 도착하지 못하므로 가격의 효율성이 상실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넷째 : 쇠고기 수입증량에 의한 산업피해개선

양돈업의 불황이 과거에는 주기적인 피그-싸이클이 있다고는 하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의 영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수입쇠고기를 한우쇠고기에 비해 매우 헐값에 판매하므로 양돈산업에 직간접의 산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1979년 45M/T, 1983년 47M/T, 89년 49M/T 수입)

또한 수입 돼지고기 통조림이 국내에서 50% 이상 시장점유하고 있는데 현행 50% 관세에서 200%이상 관세를 부과해야만 돼지고기 생산원가와 비슷할 것입니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신용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된 생산물을 판매, 가공유통시키므로서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생산자교육, 적극적인 소비홍보에 좀더 적극참여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대기업 양돈장의 일정생산량 이상은 국내시장가격 흐름에 따라 국내시장 보다는 해외시장수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품의 제일화, 기술개발보급, 인력양성등에 좀더 과감히 투자하여야 하며 전업 및 부업 양돈가는 개발된 선진 기술축적에 의한 국내시장수요에 대처케하여 제도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모두의 양돈산업이 육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